

NCCK언론위원회 토론회

- * 냉전적 북한 보도의 관행
- * 북한의 대중문화 개방

“적대적 분단 언론에서 상생통일의 언론으로”

2021년 11월 29일 월요일 | 조에홀(한국기독교교회관)
Live Streaming - <https://youtu.be/owhJlrC1x1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토론회

남북 교류와 평화의 전제 조건

적대적 분단 언론에서 상생 통일의 언론으로

2021년 11월 29일(월) 오후 2시

조에홀(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유튜브 Live Streaming
<https://youtu.be/owhJlrc1x1k>

주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사회: 김형태 변호사(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주제 1: 냉전적 북한 보도의 관행

발제: 김현경 기자(MBC, 통일방송연구소 소장)

패널: 강진욱 선임기자(연합뉴스), 김수한 기자(헤럴드경제),
임을출 교수(경남대학교)

주제 2: 북한의 대중문화 개방

발제: 이재봉 명예교수(원광대학교)

패널: 박미자 소장(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유영호 대표('월가월북'),
정일용 기자(전)(연합뉴스, 전 한국기자협회장)

일·정·표

시 간	구 분	담 당 자
14:00 ~ 14:10	안내 및 인사	안내: 김영주 국장 인사: 김상균 부위원장
14:10 ~ 15:10	제1주제 발제 및 토론	사회: 김형태 변호사 발제: 김현경 기자 토론: 강진욱 기자 / 김수한 기자 / 임을출 교수
15:10 ~ 16:10	제2주제 발제 및 토론	사회: 김형태 변호사 발제: 이재봉 명예교수 토론: 박미자 소장 / 유영호 대표 / 정일용 前기자
16:10 ~ 16:40	종합토론	사회: 김형태 변호사

인·사·말·씀

김상균 (NCK 언론위원회 부위원장 / 다튜멘터리3(주) 대표)

지난 11월 19일 저는 임진각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3주년을 맞아 4월 27일 부산역에서 출발한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단이 마무리하는 자리였습니다. 행사를 막 시작하려는 순간 북쪽에서 남쪽으로 철새 수백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길조라고 말했습니다. 민족의 혈맥을 하나로 잇자는 사업은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공동선언에서도 남북 정상이 합의한 역사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압박을 받았겠지요. 이름만 남아있는 유엔사의 제재로 중단되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갖던 날입니다. 저는 일산 킨텍스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정상이 판문점의 군사분계선에서 악수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권유로 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으로 건너갈 때 지켜보던 국내외 3천여 명의 보도진들은 떨리는 감격의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2018년 9월 19일 능라도 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북한 주민들에게 한 연설은 지금도 가슴을 벅차게 하는 연사입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남북공동선언은 국회의 비준도 받지 못했습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한반도는 다시 봄날의 따뜻했던 기운을 상실한 채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NCK 언론위원회는 남북 교류와 평화의 전제 조건으로서 이 땅의 언론이 적대적 분단 언론을 청산하고 상생 통일의 언론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개도국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이 <기생충>, <오징어게임>, BTS(방탄소년단)의 K팝 등 문화 콘텐츠로 세계 최정상 인기와 평가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언론과 대중문화도 넉넉하게 개방해도 좋은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분단 76년. 긴 세월만큼 남과 북은 서로 많이 다릅니다. 다른 만큼 우리 한반도는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토론회가 국민들의 평화와 통일에의 염원을 실천해 나가는 데 작지만 소중한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중차대하고 민감하기 짝이 없는 이 과제를 사계에서 평생 치열하게 탐구하고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온 전문가·활동가 여러분의 헌신적인 협조가 없었으면 이 토론회는 열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 11. 29.

발제 및 토론

사회 : 김형태 변호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 제1주제 : 냉전적 북한보도의 관행

발제 - 김현경 기자 (MBC / 통일방송연구소 소장)

토론 - 강진욱 선임기자 (연합뉴스)

김수한 기자 (헤럴드경제)

임을출 교수 (경남대학교)

■ 제2주제 : 북한의 대중문화 개방

발제 - 이재봉 명예교수 (원광대학교)

토론 - 박미자 소장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유영호 대표 (‘알가알北’)

정일용 전기자 (연합뉴스 / 전 한국기자협회장)

냉전적 북한보도의 관행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관련 인포데믹

김현경 (MBC 기자, 통일방송연구소 소장)

북한관련 가짜뉴스의 먹이사슬과 시장의 위력을 증명한 '2020 김정은 중태설'

“김정은 위원장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사망을 99% 확신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위원장이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

2020년 4-5월, 북한 출신의 제1야당 국회의원 당선인 2명은 김정은 위원장이 사망했거나 최소한 중태에 빠졌다고 단언했다.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들도 이들의 발언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근거는 북한 최대의 기념일인 태양절(4월 15일, 김일성주석 생일) 행사에 불참하는 등 북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정황과 실체를 알 수 없는 소식통들의 전언이었다. 2020년 봄의 김정은 사망-중태설은 북한 관련 오보의 먹이사슬과 가짜뉴스 시장의 위력을 드러내는 계기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기간은 불과 20일이었다. 시작은 국내의 저명한 북한 전문가의 '관측'이었다. 잠행(?)이 시작된지 닷새만인 4월 17일, 이 전문가는 기관 분석자료를 통해 김위원장의 건강이나 신변에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한의 최고 기념일인 태양절(4월 15일, 김일성 생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북한 내부에서는 “불경스러운 사건”이라는 것이 건강이상설을 제기 하게 된 근거였다. 근거가 약하다보니 처음에는 언론들이 적은 가능성 정도로 조심스럽게 다뤘다.

이후 국내 북한전문 매체가 중태설의 기사요건과 중요한 뼈대를 완성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4월 12일” “묘향산 향산진료소”에서 “심혈관 시술”을 받고 인근 “향산 인근”에서 치료 중, “집도위는 평양 김만유병원 외과의사”라는 등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다. 점점 커지던 파장은 이후 유력 외신들이 가세하며 걷잡을 수 없는 쓰나미로 확대됐다. 외신에는 미국의 당국자들이 인용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백악관 출입기자의 트위터에, CNN은 정규 홈페이지와 보도에 미국 정부가 김위원장의 ‘중대한 위협’ 정보를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인용된 근거가 북한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인터뷰였다. 김정은 유고설이 ‘미국 정부’ 또는 ‘미국 정보기관’을 인용한 CNN의 보도가 되자 시장도 움직였다. 이날 한국의 주가는 한 때 3% 가까이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도 급등했다.

가짜뉴스 확산에 끼어든 ‘페이크 동영상’과 플랫폼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장난삼아, 혹은 악의적으로 조작한 동영상까지 유튜브에 등장했다. 김정은 사망을 알리는 조선중앙TV 보도 형식이다. 유명 아나운서 리춘희 방송원의 음성과 평양 노동당중앙위원회 청사를 배경으로 한 화면의 부고 동영상 내용을 권위 있는 북한전문 인터넷매체가 이를 기사화했다가 삭제했다.

유튜브 동영상은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깜빡 속을 정도로 정교했다. 하지만 북한전문가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면 조작임을 알 수 있는 수준이었다. 지난 2011년 김정일위원장의 조선중앙TV 부고를 조금 손봐서 만든 것으로, 특히 화면에 게재된 신문 소재목의 맞춤법조차 틀린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자들이 동요하고, 북한에 전문성이 뛰어난 인터넷매체가 이를 게재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이미 내외신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정황이다 보니 담당 기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고,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그 동영상은 결정적 단서로 여겨졌을 것이다. 망치를 든 사람 눈에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고 정보를 찾는 사람의 눈에는 조작동영상도 정보로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내외신이 합동으로 가짜뉴스를 확산시킨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4년 전 CNN은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인 김정희 전 경공업부장이 독살됐다는 오보를 낸 적도 있다. 과거 북한 관련 가짜 뉴스는 주로 한국에서 시작됐다. 부정확한 정보나 소문, 편견으로 오보나 가짜뉴스가 나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국 정부가 가짜 뉴스 생산에 개입하기도 했다. 이 시기 서방의 유력 언론들은 오히려 이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곤 했다.

김일성 사망설에서 북한 핵무기 증언까지.. 오보의 견고한 카르텔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가짜뉴스는 1986년 11월 ‘김일성 사망’ 기사다. 조선일보가 세계적 특종이라며 호위를 냈다. 한국 국방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김일성 유고설을 사실상 확인해줬다. 당시 근거는 DMZ에서 김일성 사망 소식과 장송곡이 방송되고 있고, 예정된 몽골 국가원수의 방북이 취소됐다는 근거까지 제시됐다. 이를 바로잡은 것은 외신이였다. UPI 통신은 김일성 주석이 평양 공항에서 몽골 국가원수를 영접했다는 뉴스를 전했다. DMZ의 특이동향에 대한 잘못된 정보는 유엔사령부가 바로잡았다. 부끄러운 관-언 합동 오보소동이였다.

그로부터 8년 뒤인 1994년 7월, 김주석이 실제로 사망한 직후 프레스센터에서는 두 명의 고위 탈북자 귀순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국 정부, 안기부가 주최한 행사였다. 북한 총리의 사위였다는 강모씨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이미 핵무기 5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 나

아가 이듬해부터는 대량생산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증언했다. 북한 총리의 사위로 권력 깊숙한 곳에서 오가는 내밀한 고급정보를 한국의 정보기관이 보증하는 모양새였다. 이 증언은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했다. 당시 IAEA와 미국이 확보한 정보와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북한은 당시 아직 무기화단계까지 가지 못한 소량(1-2개 분량)의 핵물질 원료를 확보했을 것이라는 것이 정설이었다.

그렇다면 왜 한국정부는 문제의 증언을 사실상 유도해 기사화하도록 했을까? 미국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북-미 대화를 방해하기 위해 연출한 미묘한 기자회견’이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강씨의 핵무기 5개 보유 발언이 한국 정보당국의 사주를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당시 중단과 속개를 거듭하던 북-미 대화는 북한이 더 이상 핵개발을 하지 못하고 핵 확산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과거 핵(핵물질)을 봉인-동결하고 경수로 등을 지원하며 북미관계를 정상화 하는 내용이였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였다. 과거 핵을 묻어두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시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였다. 게다가 김일성 사망 조문파동 이후 남북관계는 최악이였다. 핵무기 5개 발언은 북-미 핵협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장된 탈북자의 증언을 이용하려는 의도로 의심받기에 충분했다.

2016년 2월에는 정부가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 처형설을 흘렸다. 죽었다던 리영길은 석달 뒤 모습을 드러냈다. 설익은 정보를 서둘러 흘린 그 날,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한 정치권과 전문가, 심지어 정부 부처 내부에서의 비판이 부담스럽던 상황이였다.

코로나-19 대유행 국면에서 인포데믹은 전염병만큼 무섭다는 말이 나온다. 가짜정보나 뉴스는 세계적 현상이다. 문제는 북한을 둘러싼 가짜뉴스는 그 어떤 가짜정보와 뉴스보다 악의적이고 심각하다는 점이다. 주류 언론과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진지하게 오보와 가짜뉴스 생산-유통 과정에 참여하고, 이후 가짜나 오보로 밝혀지더라도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0년 4월의 김정은 위중-사망설 소동에도 세계적인 언론, 한국의 정치인들이 다양하게 개입했다. 청와대와 통일부 등 한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김정은의 신변에 특히 동향이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이를 무시했다. 과거에는 일부 언론이 오보를 생산하더라도 외신 등 다른 언론사들이 침묵하거나 비판함으로써 확산이 저지됐지만 최근에는 자정기능 자체가 마비된 것 같이 보인다.

한 언론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멀쩡한 모습을 드러낸 뒤, 김정은 위원장의 손목 사진을 확대해 심혈관 시술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 기사를 냈다. 상처 부위가 일반적인 심혈관 시술과는 달랐지만 아픈 것이 분명하다는 확산을 위한 증거 수집은 계속 됐다. 99% 사망설을 주장했던 지성호 국회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오류가능성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제나름대로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말한 것”, “그의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속단하지 말고 좀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가짜뉴스의 확산 바탕에는 정보통신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있다. 과거에는 정부가 정보의 상당부분을 독점하고, 고급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정치인이나 소수 탈북민의 증언을 신문, 통신 방송 등 전통 매체들이 다루는 구조였다. 하지만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보와

뉴스 시장의 플레이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시장도 커졌다.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매체나 개인 유튜버들도 손쉽게 구독자/소비자에 도달할 수 있게 됐다. 그중에는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 중 탈북민들의 활약이 크다. 전통 언론매체들은 라이벌 언론사 뿐 아니라 다양한 뉴스 생산자들과 클릭수를 놓고 경쟁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로 북한에 대한 해외 언론들의 관심이 커진 것도 큰 변화다. 21세기 들어 미국의 골칫거리이던 국제적 악당들 - 오사마 빈 라덴, 후세인, 가다피, 카스트로- 등이 차례로 사라졌다.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 체제의 뉴스 가치는 높아졌다. 김정은은 자기 고모부를 처형하고, 미국을 상대로 미사일과 핵실험을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만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에는 서방 상주 특파원도 없고 취재도 쉽지 않다. 그래서 북한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뉴스 시장이라는 말도 나온다.

존재 여부조차 불투명한 소식통을 발원지로 한 소문이 정보로 둔갑하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뉴스가 되면서 내신과 외신을 거쳐 또다시 한국으로 되돌아와 정쟁과 뉴스로 무한 반복되는 가짜뉴스의 생태계 고리가 형성된다.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뉴스가 북한으로 전파되는 사례다. 외부와 몰래 연계를 갖는 북한 사람들을 통해 이 소문이 북으로 들어가고, 암암리에 전파되다가 이른바 북한 소식통발 뉴스로 둔갑해 나오기도 한다.

검증 의무가 무시되는 북한관련 뉴스

가짜뉴스가 계속 확산되는 이유는 검증되지 않은 ‘북한 소식통’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권위를 주고 검증 책임도 건너뛴다는 점이다. 2004년 2월, 영국의 BBC는 “악으로의 접근(Access to Evil)”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북한의 화학무기 생체실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사실이라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뉴스였다. 그로부터 1년 전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인 핵과 화학무기에 대한 정보를 근거로 이라크를 침공했다. BBC가 북한의 화학무기 생체실험의 증거로 제시한 것은 보위부 예하조직의 직인이 찍힌 ‘이관서’였다. 그 서류에는 정치범을 “화학무기 액체가스 생체실험에 필요한 대상으로 2.8비날론연합기업소 보위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우리 정보당국은 그 서류가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서의 형식이나 발급 주체도 엉터리였지만 잠깐만 생각해보아도 ‘생체실험’이라는 1급 기밀을 문자로 써서 호송담당 하급관리의 손에 쥐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목격자 K씨는 정치범 수용소 감시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었다.

서구의 언론인들 가운데 일부는 유독 북한 뉴스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지만, 북한이 수많은 정치범을 수용소에 구금하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그 증거를 은폐하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엄격한 사실 확인은 그 범죄 은폐에 기여한다는 이유에서이다. 언론이 이렇진대 일반인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보수단체나 개인으로까지 확장된 다양한 뉴스 생산 유통의 주체들은 가짜뉴스에 대

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고 주민들을 해방시키려는 선한목적의 전쟁을 치른다는 신념과 목적의식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폐쇄성과 권위주의 체제가 북한관련 가짜뉴스-오보 시장의 생태계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소문이 진실이 된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고, 북한이 공식 발표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다. 2011년 김정일 위원장 사망 사실은 무려 51시간 30분간 공개되지 않았다. 2008년 8월 김정일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에도 북한은 이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한 발 더 나아가 그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 조작된 사진을 공식 매체에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에 대한 취재가 제한되고 어렵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소식통과 오보의 유혹은 클 수밖에 없다.

전쟁으로까지 이어진 가짜뉴스와 오보

하지만 목적성과 신념, 고정관념이 거짓정보와 결합하면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2003년 봄 이라크 전쟁이 그것이다. 미국은 이라크가 핵과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했다는 정보를 근거로 전쟁을 개시했지만 그 정보는 거짓으로 밝혀졌다. 정보원 찰라비(Ahmed Chalabi)는 군사 쿠데타로 축출된 왕실의 측근 귀족 출신으로 미국에 망명한 뒤 후세인에 반대하는 이라크 내 지하조직을 운영하며 CIA로부터 매달 33만 달러가 넘는 정보비를 받아왔다. 그가 거짓 정보를 제공한 목적은 정보비 외에도 자신의 영향력 확장과 정치적 야심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정보원 '쿠브볼'은 독일에 망명한 이라크 화학자로 그의 정보는 미국 정보기관의 검증조차 거치지 않은 부실한 것이었다. 미국 상원정보위원회는 2008년 보고서에서 이라크 전쟁은 심각한 정보실패로 인한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시인했다. 네오콘의 강경한 신념과 그 입맛에 맞춘 망명자들의 거짓정보가 미국의 국가정보를 오염시켰다는 말이다. 개전의 명분을 제공한 찰라비는 전쟁이 나자마자 미군 수송기편으로 이라크로 화려하게 귀향해 과도정부 구성을 주도했으나 곧 미국과 이해관계가 틀어지면서 미국과 이라크 모두로부터 외면당하고 말았다.

우리 정부는 북한 최고지도부의 비공개 동향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 청와대가 직접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독설을 부인한 배경은 가짜뉴스가 위기 요인이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환율과 주가가 요동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기 때문이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북한의 이상 징후는 그대로 코리아 리스크가 되고 무역국가인 대한민국에는 치명적이다. 잘못된 정보원과 가짜뉴스는 여론과 정치를 왜곡시킨다. 이렇게 왜곡된 여론과 정치는 안보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치양극화가 정보의 왜곡과 양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묘수가 시급하다. 또 가짜뉴스로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북한발 가짜뉴스는 계속해서 우리의 주가시장과 사회, 국내외 언론과 정치를 춤추게 할 것이다.

토 론 문

강진욱 (연합뉴스 선임기자)

1. ‘가짜 북한 뉴스’의 진원지는?

- ‘가짜 북한 뉴스’를 퍼뜨리는 언론을 비판하고 반성을 촉구하는 일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가짜 북한 뉴스’의 최상위 포식자는 언론이 아니다. 흔히들 보수 언론을 주목하지만 이들은 최상위 포식자의 하위 꼭두각시일 뿐.

- 계획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조직이 존재한다. 매우 주도면밀하게 북녘 지도자를 악마화하고 그 사회주의 체제를 악의적으로 매도하는 (국가 정보) 조직이 있다. : ex) 6.15 정상회담 직후 급속 확산했던 ‘곰발바닥 요리’ 보도 / “김정은이 정성택의 머리를 ...”(자료사진 3.4) / ‘기쁨조’

2. ‘가짜 북한 뉴스’는 인포데믹 이상!

- ‘가짜 북한 뉴스’가 단지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문제라면 사실 여부를 밝히거나 시간이 지나 사실이 밝혀지면 될 일. 북녘 지도자의 사망설은 한 두 달이면 사실 여부가 드러난다. 적당히 흘러들으면 될 일이고 ‘진짜 북한 뉴스’를 생산하면 될 일.

- 문제는 가짜 뉴스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일(했을)까’ ‘~(인)가 아닌가?’ 하는 식으로 장난질을 치는 언론(인)이 부지기수.

3. 언론(인)의 반복 적대 의식

- ‘가짜 북한 뉴스’ 문제의 본질은 북녘에 대한 그릇된 인식. 북한 뉴스를 취급하는 이들(언론인, 연구자, 평론가 모두) 거의 전부가 - 아마 99% 이상 - 일정 정도 ‘반복 적대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봄. 이런 반복 적대의 편향에서 벗어나려 노력하는 언론(인)도 시시때때로, 자기 검열 또는 자기 방어 차원에서 반복 적대감을 표출해야만 하는 현실! 왜? 우리 사회 전체가 집단적 반복 적대 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

4. 반복 적대의 DNA

- 언론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가 반복 적대 의식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늘 ‘가짜 북한 뉴스’에 전염되는 것은 남한의 부도덕한 정권들이 대를 이어가며 ‘가짜 북한’을 조작해 왔기 때문. : ex) 이승만 정권 시기 우리 군.경의 민간인 학살을 인민군의 소행이라고 뒤집어 씌웠고, 심지어 군인에게 인민군복을 입혀 사건의 내막을 조사하러 내려간 국회의원들을 공격하는 일까지 ... 농림부 장관 지낸 이를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 ‘가짜 김일성

론' .. '가짜 무장간첩(선)' '가짜 북한의 테러' ...

5. 역지사지(易地思之)

- 역지사지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 사회 또는 개인 간의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는 최선의 방도. 북한(보도)에 대해서는 절대 금기! 역지사지가 안 되니 갈등은 날로 증폭되고 대립이 격화될 수밖에!

- 역지사지는커녕, 우리(남한)를 절대시하고 저쪽(북한)은 멸시하는 지경이다. 앞서 지적한 반복 적대 의식 때문. : ex) 너무도 흔하게 쓰는 말 '북한 놈들 ...'(저것들 ...) / "김정은은 자기 고모부를 처형하고 ... "

전두환이 김재규를 처형했나?

김영삼이 서진림쌀롱 조폭들을 처형했나?

이승만이 조봉암을 처형했나?

전두환, 박정희가 술한 간첩 사건을 조작해 많은 이들이 형장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

6. 반복 적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는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다.

- 황장엽을 데려올 때 이한영을 죽였고(1997.2), 태영호를 데려올 때 김정남을 죽였으니(2017.2), 또 누군가 고위 탈북자 한 명을 데려오면서 김정남의 아들 김한술을 죽이지 않을까... 김정남 사후 김한술의 신병이 CIA로 넘어갔는데 그 후 "김정남은 CIA 첩자라서 북한 측이 살해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는 상황. 사건이 일어난다면 십중팔구 어느 해 2월일 것. 김현희 왈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선물을 바치려고 ... "

[사진 1]

20일만에 '무덤'서 나온 김정은...사망설 키운 인포데믹

송고시간 | 2020-05-02 15:30

최선영 기자
기자 페이지

전문가의 건강 이상 추측에 탈북민 네트워크·보수 유튜버 등 가세해 일파만파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당선인도 미확인 주장으로 혼란 키워 "가짜 뉴스가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불필요한 비용 초래하는 관계 끊어야"



사망설로 세계 뒤흔든 김정은, '보한 듯' 함박웃음으로 견재과시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사망설까지 돌며 전 세계를 들썩하게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박 웃음과 함께 20일만에 재등장했다. 사진 왼쪽은 그가 마지막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지난달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보도날짜는 4월 12

[사진 2]

HOME > 시사 > 국제

김정은 '부활' 부른 탈북민·보수 유튜버 '인포데믹' 나비효과

사망설로 세계 뒤흔든 김정은, '보란 듯' 함박웃음으로 견재과시

전선화 기자 승인 2020.05.02 19:30 댓글 0



- 네티즌 관심뉴스**
- 01. 무주, 제1기 반딧불
 - 02. '참다래 아저씨' 정
 - 03. 경북궁 '수라간 시
 - 04. 달아 오르는 김장철
 - 05. 한국인의 '떡 만들
 - 06. 권익현 부안군수, 철
 - 07. '유기농의 메카' 과
 - 08. [워드 코로나 시대
 - 09. 영도 불치노조장

[사진 3]

국제

트럼프 "김정은, 고모부 장성택 처형 뒤 시신 전시"

김종원 기자 terryable@sbs.co.kr 작성 2020.09.12 06:14 조회 7,005

프린트 글자 크기 + -



이혼전문 태하
새로운 인생의 시작, 태하가 열어드립니다.
24시간 상담 ☎ 02-568-4408

SBS 연예뉴스
가십보단 팩트를, 재미이기에 풍경이게!

[사진 4]

NewsRoom Exclusive

北 김정은, 고모부 장성택 처형 후 머리 전시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 사적 모임에서 김정은의 장성택 살해와 시신 전시 등 상세하게 전해

글 월간조선 뉴스룸



김정은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월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결렬됐다. 사진=뉴시스

[사진 5]



권력 위기 느꼈나... 김정은, 고모부 이어 이복형까지 제거

[김정남 암살]

嫡子 김정남에 정통성 콤플렉스... 北내부 반체제 세력과 김정남 연계 가능성도

김정은, 잠재적 라이벌 제거위해 정권 장악 직후부터 암살 움직임
중국이 그동안 김정남 신변보호... 급변사태 때 대안 카드로 여겨
최근 北정권교체 언급에 불안감, 김정남 존재에 더 부담 느낀 듯

이용수 기자

입력 2017.02.15 03:04 | 수정 2017.02.15 06:18



5
>
1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의 암살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령에 따른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 당국자는 14일 "아무리 정치적 영향력이 없다고 해도 일개 공작 부서가 '백두 혈통'을 제거하긴 부담스럽다"며 "이유는 불분명하나 김정은이 김정남 암살을 최종 허가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김정남에 대해 김정은이 느낀 '혈통 콤플렉스'와 라이벌 의식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은 한·미 정부가 '김정은 정권 교체'를 언급할 때마다 자신의 대체 재르 키로데오 기저나이 조재르 부괴체해으 거으르 바이다 시제르 부하 저권

[사진 6]

[북한읽기] 김경희도 독살했는가

"장성택 사건 날조한 김정은에게 김경희는 반발하며 처형 반대해" 고위층 탈북자들 증언에 이어 "김경희도 독살됐다" 주장 나와 백두 혈통 살해 현실화된 지금, 北 당국은 김경희 근황 공개해야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입력 2017.02.27 03:11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지난 13일 필자는 국제사법재판소(ICC)에 김정은의 집단학살 사건인 장성택 사건을 고발했다. 그날 김정남이 암살됐다. 설마가 현실로 일어난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은 사건이었다. 김정남 암살 사건의 충격을 받으며 문득 떠오른 것은 바로 김정일의 누이동생 김경희였다. 장성택 사건을 조사하면서 김경희에 대한 고위층 탈북자들의 증언이 잇달았지만 김정남 암살을 통해 비로소 명확해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진 7]



문화저널21

저널21 **피플+** 정치 경제 문화 포토 사회 연예

[인터뷰] “김정남, 독살 당했다면 김경희가 원인”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北비밀정보 유출 가능성 막은 것”
“김정남 대모, 김경희로부터의 정보유출 우려한 것 아닌가”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2/16 [11:00]

Black Friday 세일 지금 시작 ⓘ ×

폰케이스 & 테크 액세서리 - 최대 25% off! 곧 마감됩니다!

CASETIFY **구매하기**

위치 기반 마케팅/데이터 분석 ⓘ ×

국내 No.1 위치기술/데이터 회사

로플렛 **열기**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北비밀정보 유출 가능성 막은 것”
“김정남 대모, 김경희로부터의 정보유출 우려한 것 아닌가”

[사진 8]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은 지난 15일 오후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김정남 독살과 관련해 이 같은 가능성을 제기했다. 구 이사장은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국가정보원 북한담당 기획관,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 자문위원을 지낸 북한 전문가다.

구 이사장은 “김정남은 권력에서는 밀려나 있지만 어쨌든 김정일 가족 중의 일원이다. 그렇지만 김정은 통치체제에 대해 깊이 있는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김정남으로부터 새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정보는 김경희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한 언론에 대한 접근 차단, 계속 유지되어야 하나

김수한 (헤럴드경제 기자 / 북한학 박사)

대통령이 북한 평양의 초대형 경기장에서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연설을 하고, 남북 정상이 백두산 천지에서 두 손을 맞잡는 장면은 비현실적 꿈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한반도에서 3년 전 일어났던 일이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노딜’로 인하여 남북 관계는 다시 상당히 후퇴했지만, 과거 냉전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냉전 시대와 비교해 달라진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남북 정상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핫라인이 청와대와 평양 주석궁에 설치되었고, 북측 정상은 휴전선을 넘어 남녘땅을 밟아 남측 정상과 요인들을 두루 만났다. 북측에서는 자신의 주적이 ‘전쟁’이라고 공언하며 더 이상 한반도에서 분쟁을 도발할 의도가 없음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제 한반도는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에 기대어 상대를 100% 신뢰하고 경계를 풀어야 할 시기라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한반도에서 안보 상황이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 또한 과거와 다르게 대응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본다.

가장 먼저 변화해야 할 분야는 언론 분야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북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언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언론은 북한 신문을 1차 자료로 삼아 북한 소식을 한국에 보도하는 과정에서 과거 냉전적 시각의 보도 행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북한의 안보 위협은 국민 모두의 관심사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상 이상으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이를 통해 상대에 대한 적대감을 심화시키는 오늘날의 언론 북한 보도 행태에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보도 행태로 인하여 실제보다 더 큰 위기가 초래되고 있으며, 더 큰 적대감이 양측에서 계속 생겨나는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결국 양측 모두에게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현대 국제 사회에서 힘의 논리로 상대를 제압하려는 태도는 더 이상 호응을 얻지 못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무력으로 침공하여 현재 점령하고 있지만, 그 대가로 러시아는 G8에서 퇴출당하였고, 국제 사회로부터 제재도 받고 있다.

다행히도 남측도 북측도 무력을 통한 통일에는 반대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과 발전이 이 시대를 지배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부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양측 대중의 소통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 주민 소통과 교류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언론이다.

독일 통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동서독의 통일 이면에는 동독인과 서독인의 시민사회 교류가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밑바탕에는 상대 측 언론을 열람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 남북의 언론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남측과 북측 주민들이 모두 상대측 언론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언론의 통합 효과는 특히 오랫동안 분단된 민족의 화해와 치유를 위해 매우 절실히 요구된다.

통일의 순서는 경제적 통합, 정치적 통합, 사회적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유럽연합(EU)이 추구한 모델과 비슷하다. 남북이 기능적 통합을 통해 경제적 이권을 공유하는 경제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러한 경제공동체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EU처럼 다음 단계로 정치적 통합을 추진해 볼 수 있다.

정치적 통합이 이뤄질 경우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통일’이 이뤄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남측과 북측 주민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어야만 남북은 진정 하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통합은 통일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통합에는 시간이 걸린다. 정치적으로 남북이 통일되었다고 하더라도 남과 북의 주민이 함께 대등하게 더불어 사는 사회가 이뤄지려면 한 세대 이상이 걸릴지도 모른다. 이러한 사회적 통합의 가장 밑바탕에는 언론을 통한 동시대인의 상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남북 언론 개방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인지도 충분한 논쟁점이 될 수 있다. 혹자는 상대방 언론을 서로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남북이 동시에 상대방 언론에 대한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는 논쟁은 체제 경쟁 시기에는 의미가 있었겠지만, 사실상 체제 경쟁의 역사가 마무리된 오늘날에는 공허할 뿐이다. 남측에서 이제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북한 신문을 보면서 북한 사회를 동경하지는 못할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면서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 물론 힘겹게 버티면서 나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의 경제적 위기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우려로 가득하다.

북측 경제 수준 또한 오늘날 첨단 과학과 기술이 지배하는 국제 경제 현실에서 초라하기 그지없을 뿐이다. 현재도 북측 언론에서는 농산물 증산이나 최신 농업기술 개발이 중요한 기사로 다뤄지고 있다. 세계 최첨단 산업의 ‘짚’로 불리는 반도체의 세계적 생산 기지인 남측과는 비교 상대조차 아니다. 남과 북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경쟁자로 간주하기는 극히 어려운 상태다.

남북은 경제적 격차가 극심하며, 이러한 차이는 남북이 상대방 언론을 접할수록 더욱 극명하게 느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글과 말을 쓰는 동포로서 우리는 북측 언론을 통해 기사의 행간을 읽을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이 북측 언론을 매일 접하다 보면 북측에서 쓰는 프로토콜이 무엇인지, 그들이 사용하는 수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점점 쉽게 간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북측 언론을 분석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다. 우리 국민은 대부분 언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이해하고 있다. 북측 언론을 계속 접할 경우, 어느 정도의 상식과 소양을 갖춘 사람이라면 북측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환하게 이해하고 그들

의 속내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적 북측 언론 행간 읽기 능력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능력이 쌓이고 쌓여 남북 사회적 통합의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측 언론의 일반에 개방함으로써 일부 정파와 계층이 북풍을 정치적 공작으로 이용하는 행태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까지 일부 정파와 계층은 북한적 요소를 재료로 삼아 안보 위기를 증폭시키고 사회에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보도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받아왔다. 큰 문맥은 무시한 채 자극적 표현만 집중 부각시켜 일반 대중에게 잘못된 현실 인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지적받기도 했다. 이제 더 이상 민족의 반목과 질서를 조장하고 부추기는 보도 행태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차단할 것은 차단하되, 북측을 오로지 극악한 적으로만 규정하는데 혈안이 된 보도 행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분단 저널리즘에서 벗어나는 방법

임을출 (경남대학교 교수)

북한 관련 언론보도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커져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에 대한 더욱 사려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SNS 시대에 언론의 협조 없이는 정부가 대북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정작 문제는 우리 언론의 북한에 대한 왜곡된, 혹은 잘못된 보도가 북한의 반발을 초래하고, 이 반발이 우리 사회내부에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신을 뿌리 깊게 만들어 정작 북한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해도 호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점이다.¹⁾ 이는 비단 현재뿐 아니라 1990년 초부터 지금까지 반복해서 지적되어온 문제점들이다.

결국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보지 못하고,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북한은 대화와 협상의 상대가 아닌 주적으로만 규정되고, 교류협력 무용론으로 인한 단절이 영구화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오보기사가 북한에 대한 맹목적인 부정적 인식과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확산시키고, 이런 흐름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면서 대북정책은 보수화되고, 기다리는 전략으로 고착화되는 등 남북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관련 보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확인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보니 적지 않은 경우 가설이나 상상력에 의존한다. 이전과 달리 북한 보도 매체나 프로그램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있고, 탈북자들이 가세해 북한 내부 소식을 우리 사회에 확산하는 채널로 기능하면서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정보와 첩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문이나 억측들이 사실과 뒤범벅되어 시시각각 쏟아져 나오는데, 옥석을 가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속보 경쟁에 따라 기사화되면서 북한 보도 시장은 혼돈의 바다에 빠져 들기도 한다.

북한 관련 보도가 다소 막 나가는 것은 남북 간의 깊은 불신과 관계의 경색과도 무관치 않다. 남북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 아무래도 우리 언론들은 북한 관련 보도에 보다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류협력의 파트너로서 북한 측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북한 관련 인사와의 접촉이나 현지 방문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 확인도

1) 임을출, “북한 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관훈저널』 2014년 봄, 통권130호 (서울: 관훈클럽, 2004), pp.95-96 참조.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과 단절이 장기화되면 보도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오보는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지나가는 것이 상례화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오보에 대해 언론이 스스로 반성하거나, 남이 문제 삼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북한 관련 보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특정 언론들이 지향하는 정치적, 이념적인 편향성이 작용하고 있는 점이다. 언론은 정당과 서로 다른 제도로 다른 역할을 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기능이 중복된다. 언론은 정당과 함께 모두 여론을 지배하고 권력을 추구한다. 여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과장되고 왜곡된 의견과 주장을 퍼뜨린다는 점에서 둘은 구별하기 어렵기도 하다.²⁾ 보수언론들은 북한이 일정부분 자초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북한은 비정상적인 국가이고, 3대 권력세습을 한 김정은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개인숭배와 부패 때문에 개혁·개방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킨다. 그래서 북한 관련 보도는 부정과 비판 일변도의 분석과 평가만이 나오고, 내부 소식은 검증 없이 보도되거나 부풀려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럴 경우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엄연한 체제로서, 또는 나름대로 자기 합리적 논리를 갖춘 행위자로서의 북한을 제대로 분석하고 평가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도 북한 뉴스를 당파적으로 다루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

언론들이 대북 소식통발 북한 소식 검증 능력이 부재하고, 외신에 의존하는 경향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김정은 신변 이상설을 처음 전한 언론은 4월 20일 대북 소식통의 전언을 근거로 보도한 한 인터넷매체였다. 이틀 뒤 미국 방송 CNN이 ‘김 위원장이 수술 뒤 위중한 상태’라는 정보를 미 정부가 주시한다고 보도하였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이 CNN을 인용하고, 국내 언론들도 이들 보도를 검증 없이 받아쓰면서 신변 이상설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국내에서 별다른 파장을 낳지 못했지만, CNN을 비롯한 해외 ‘유력’ 언론들이 보도하자 국내 언론들이 무분별하게 ‘받아쓰기 보도’를 해 사태를 키운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CNN과 같은 외신이 북한 뉴스를 보도하면 국내 언론들은 거의 받아쓰는 경향은 언론사대주의로 부를 만하다.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외신의 추측보도를 여과 없이 보도하거나 위기 조장 외신을 인용하는 보도 행태가 공통적으로 나타나 혼란 속에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태도와 정보력 부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특히 북한 최고지도자의 건강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마저도 익명의 대북소식통의 말을 여과 없이 인용, 보도해 국민들의 불안과 위기 조장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탈북자 출신 정치인, 전직 관료, 학자 등 자칭 북한 전문가라는 일부 인사들이 보여준 행태도 언론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는 보수 언론들이 자신들의 논조와 성향에 부합하는 전문가들만을 무분별하게 내세워 억지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구태의연한 태도와 밀접하게 맞닿아있다.³⁾ 전문가 집단은 언론과 달리 북한 체제의 불확실성이 높

2) 이대근, “정당과 언론,” 『관훈저널』 2018년 여름, 통권147호 (서울: 관훈클럽, 2018), p.6.

3) 임을출, “양호한 균형감 보여준 남북 정상회담 보도,” 『관훈저널』 2018년 여름, 통권147호 (서

아 보일수록 냉철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렇지를 못했다. 오히려 언론이 허위정보를 생산하는 데 빌미를 제공하고, 언론과 함께 무책임한 정보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도 '소식통'이라는 이름하에 출처가 불분명한 주장을 국내외 매체를 통해 전달하고, 이 과정에서 '가짜뉴스'로까지 확대·재생산되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북한 관련 허위정보의 확대재생산 방지를 위해서는 특히 언론과 전문가들의 자세와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튜브 등 뉴미디어의 등장과 소셜네트워크(SNS) 사용이 증가하는 등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언론의 특별한 사명과 선도적 역할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가짜 뉴스가 온라인, 오프라인 공간에서 횡행하는 부적절한 미디어 현상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과 낭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세와 태도는 이전과는 달라져야 한다. 즉 더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북한 정세를 정확히 판단하고 여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북한 최고지도자의 건강 등 거취와 관련한 기사는 언론보도의 생명인 사실 확인에 충실하는 모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북한 최고지도자에 대한 정보, 즉 세계가 주목하는 사례의 경우 언론은 특히 국제사회를 의식한 보도를 해야 한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일수록 언론은 정확한 기사를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와 전문가 집단도 그것을 돕는 자세가 필요하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 화해와 협력의 입장에 기초하여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남북 간의 불신과 대립의 장벽을 허무는데 기여하는 것이 분단된 나라의 언론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태도이다. 흡수통일과 조기 정권봉괴를 희망하는 사고에 기초해 북한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혐오를 조장하고,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분단 저널리즘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 국내외 언론이 북한 측에 대해 지난 수십 년 간 유언비어 식의 기사를 양산하는 무책임한 관행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은 냉전시대의 특수 상황에서 언론이 대북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언론 또한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대북 관련보도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이념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 문제를 다루는 언론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이 달성되는 데 기여해야 한다. 국내 언론이 북한 문제에 대해 평화지향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해야 외국 언론도 한반도 제반 문제를 평화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데 동참할 것이다. 분단 상태를 해소하는 것은 분단 당사자의 역량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 역량을 세계는 남측 언론의 보도 논평을 통해 저울질하고 있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국내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평화통일은 요원한 과제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과

출: 관훈클럽, 2018), p.15.

건강 이슈와 같은 민감하고 중요한 소재일수록 남북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평화 저널리즘의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평화와 통일과정에서의 미디어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특히 이때 미디어의 태도는 시선과, 배려, 비전이 중요하다. 언론인들은 언제 닥칠지 모를 통일이라는 민족사적 전환에 대한 깊은 생각을 늘 해야 한다.⁴⁾ 특히 대중적 영향력 및 대중 참여도가 높은 언론이 통합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⁵⁾

언론 스스로가 자정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보도 준칙만 지켜도 가짜뉴스는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언론과 정부, 서로 믿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언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최대한 북한 관련 정보를 언론 및 전문가 집단과 보다 폭넓게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허위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언론 간의 상호 취재와 보도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남북 간에 불신과 적대감을 증폭시키는 가짜뉴스, 오보, 심지어 날조 보도 등과 같은 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근본적 조치를 취하면서 오보 방지, 정정 및 반론보도 등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남북대화 복원 계기 시에 남북 간 언론교류를 우선 의제로서 논의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평화로운 시기보다 위기의 상황에서 터져 나오는 북한 관련 오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훨씬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언론의 중간에 위치한 전문가들의 윤리의식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전문가들도 언론인 못지않게 사실 확인을 끝까지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모든 상황에서 실체적 증거를 제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언론이 공정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표현과 용어를 사용해 북한에 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식과 토론이 이뤄지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전과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이를 둘러싼 주변 정세를 고려하면 언론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어떤 이유로든 사실의 힘을 무시하려는 논리는 정당화될 수 없다.

4) 신창섭, 『독일통일과 미디어』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11), p.11.

5) 이우승, 『분단국의 방송교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p.8.

북한의 대중문화 개방

남북교류와 평화의 전제 조건 : 북한의 대중문화 개방

이재봉 (원광대학교 정치외교학·평화학 명예교수)

1. 애틀는 임금의 초상화와 남한 언론에 그려진 북한

옛날에 한 임금이 불행하게 한 쪽 눈이 멀었다. 사진이 없던 시절이라 자신의 모습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했다. 초상화를 가장 잘 그린다는 화가를 불러 자신의 얼굴을 그리도록 했다. 화가는 큰 상을 기대하며 임금 얼굴을 정성껏 그렸다. 아무리 숨씨 좋게 잘 그려진 그림이라도 임금에게는 한 쪽 눈이 감겨진 자신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일 리 없었다. 임금은 자격지심이 생겨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흉하나며 화가를 죽여버렸다.

두 번째 화가가 불러왔다. 임금의 얼굴을 곧이곧대로 그렸던 선배 화가가 그 때문에 죽었다는 소문을 들은 터라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두 눈이 멀췌한 것처럼 그렸다. 안면마비로 입이 비뚤어지고 왼쪽 눈이 찌그러진 나처럼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사람 얼굴이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기에, 멀췌한 눈을 먼저 그린 뒤 그 눈을 다른 쪽에 포개 놓은 듯 그린 것이다. 임금은 이번에도 만족할 수 없었다. 언뜻 보기에는 아름다웠지만 자신의 참모습이 아니지 않은가. 화가는 거짓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다.

세 번째 화가가 불러왔다. 두 선배 화가들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한 사람은 곧이곧대로 그림으로써 흉하게 묘사했다고 죽었고, 다른 사람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렸지만 거짓으로 묘사했다고 죽었으니 어떻게 그려야 했을까? 여러분도 여기서 고민해보기 바란다. 자신이 화가라면 어떻게 그럴 것인가. 하나 밖에 없는 목숨이 달린 문제다.

그 화가는 궁리 끝에 얼굴 옆모습을 그렸다. 감긴 눈이 보이지 않도록 멀췌한 눈이 있는 쪽을. 임금 얼굴을 정면 아닌 측면에서 그림으로써, 거짓 묘사하지 않고도 흉하지 않게 보이는 초상화를 임금에게 바쳤다. 목숨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높은 벼슬과 큰 상금까지 받을 수 있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슬기롭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교활하다고 할까.

내가 이렇게 어설픈 꾸며본 옛날이야기는 북한에 대한 남한의 인식과 관련 있다. 우리

는 오랫동안 교육과 언론을 통해 애꾸눈 임금의 초상화 같이 묘사되는 남북한을 보아왔다. 남한에 대해서는 멀쩡한 눈 또는 밝은 쪽만 보아야했다. 부정적 측면을 들추어내면 반국가적이라고 매도되기 쉬웠다. 북한에 대해서는 감긴 눈 또는 어두운 곳만 볼 수 있었다. 긍정적 모습을 찾으면 ‘친북좌빨’이라며 처벌받기 일쑤였다.

첫 번째 화가의 임금 초상화처럼 북한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싶어도 독재자의 총칼이 무서워 가짜 그림을 그리는 사례도 많았을 테고, 교육자들이나 언론인들 스스로 북한이 싫고 공산주의를 증오해서 북한 사람들을 머리에 뿔 달린 사람처럼 터무니없이 묘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고 이른바 민도가 낮았을 때는, 두 번째 화가처럼 있는 것을 없다 하고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꾸며대도 순진하게 믿고 따르는 때가 많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바깥 세계와의 교류가 늘어나자 양심적 지식인들이나 깨친 민중을 속이기 어렵게 되었다. 언론도 잔머리를 굴려야 했다. 교활해진 것이다. 첫 번째 화가처럼 남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니 독재정권의 탄압이 두려웠을 테고, 두 번째 화가처럼 없는 것도 있는 것같이 날조해 거짓말하자니 깨친 사람들의 눈이 꺼림칙했을 것이다. 세 번째 화가처럼 독재자의 총칼을 피하면서도 민중의 눈을 교묘하게 속이는 꾀를 부렸다.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체하면서, 남한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북한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은 감추고, 남한에는 유리하고 북한엔 불리한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게 되었단 말이다.

1980년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부터 박근혜 정권까지 <조선일보>를 비롯한 극우수구 신문들이 권력에 아부하며 급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러한 반공반북 언론의 왜곡보도를 통해 독자들은 남한이나 미국 또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는 긍정적 측면만 보아왔고, 북한이나 중국 또는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측면만 볼 수밖에 없었다.

한편, 예나 지금이나 남한 정권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고 가치로 삼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도 가장 기본적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해왔다.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크게 침해한다. 국민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바람직하다거나 북한이 좋다는 등의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 북한 말과 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북한 신문이나 방송, 소설이나 시 등은 극히 제한적으로 볼 수 있다. 북한 노래나 그림, 연극이나 영화 등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다. 내가 겪은 사례 몇 가지 소개한다.

1) 국호에 대해

남북 양쪽 정식 국호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식은 한국과 조선이다. 북한과 남조선은 상대를 정상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호칭이지만 편의상 널리 쓰인다. 북한이라는 호칭을 쓰려면 남조선이란 호칭을 받아들여야 하고, 남조선이란 호칭이 싫으면 북

한이라는 호칭을 쓰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1997년 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남조선명함 파동’이 터졌다. 이석현 <새정치 국민회의> 의원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동포에게 돌린 자신의 명함에 국적을 ‘한국 (남조선)’으로 표기한 걸 문제 삼았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극우수구 신문들은 이 의원이 “국체를 부정했다”며 온갖 색깔공세를 퍼부었고, 이를 견디다 못한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눈물을 터뜨리며 <새정치 국민회의> 탈당 의사를 밝혔다.

그가 명함에 한국이란 말을 빼고 남조선만 써넣었다면 국체를 부정했노라고 시비 걸만 했다. 외국인용 명함에 남한 사람들이 쓰는 ‘한국’으로 먼저 표기하고 옆에 괄호를 달아 북한 사람들이 쓰는 ‘남조선’을 조그맣게 덧붙여 한자로 ‘韓國 (南朝鮮) 國會議員’이라고 쓴 게 국체를 부정한 일이었는가. 명함에 주소와 이름을 영어로 쓴 가운데, 서울을 일어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중국인들이 쓰는 한성 (漢城)이라고 적어 놓은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1995년 8월 해방 50주년을 맞아, <전국 언론노동조합 연맹>, <한국 기자협회>, <한국 방송프로듀서 연합> 등 남쪽 주요 언론단체들이 ‘통일 언론실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나누어진 남과 북의 현실을 인정하며, 상호존중과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상대방의 국명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원칙 아래 편의상 한국과 조선이라는 약칭으로 쓰기로 제안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쪽을 조선이라고 표현하는 남쪽 언론은 거의 없다. 아마 유일한 예외라면 <전국 언론노동조합 연맹>이 펴내던 주간지 <미디어 오늘>에서 볼 수 있던 ‘조선 (북한)’이었을 것이다.

2) 김일성에 대해

김일성은 1920년대 만주에서 중학교 다닐 때부터 독립운동에 힘쓰며 1930년대에 목숨 걸고 항일 유격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냉전시대 남한 교육과 언론은 그를 ‘가짜 (항일독립운동가)’로 매도했다.

1994년 <내외통신>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일반적인 상식과 주민들의 생활모습” 등을 살펴보는 <<북한조감>>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국가정보원 전신인 당시 안전기획부가 운영하던 <내외통신>은 북한에 관한 모든 정보를 취합하여 언론사에 건네다 1999년 <연합뉴스>에 합병되었다. 1994년엔 개별 언론사가 북한에 관해 독자적으로 취재하지 못하고 이 통신사를 통해 정보를 전달받았다.

<<북한조감>> 부록에 ‘북한주요인물 30인’이 수록되었다. 김일성을 소개하는 데엔 1936년 조국광복회 조직, 1937년 6월 함남 보천보 습격, 1937년 9월 함남 증평리 습격 등의 약력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오진우는 1935년 ‘항일유격대’에 참가했고, 박성철은 1934년

‘항일유격대 대원’이었으며, 최광은 해방 전 ‘김일성유격대 대원’이었다고 소개하는 등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써진 조그만 쪽지가 끼워진 채 배포되었다. “북한 주요인물 30인 약력 가운데 항일투쟁활동 등 일부 내용은 북한측 주장임.” 이에 나는 다음과 같이 공개적으로 안기부를 비판했다. 27년이 지나도록 안기부/국정원 반응은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쪽지는 그 동안 안기부가 얼마나 무능했거나 횡포를 일삼았는지 짐작케 한다. 첫째, 막대한 국가예산을 쓰면서 북한 정보를 독점해온 안기부가 북한을 반세기 동안이나 통치해온 김일성의 과거 행적을 독자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북한측 주장’대로 옮기기만 했다면, 안기부 창설 이래 30여년이 지나도록 무슨 일을 했기에 것처럼 기본적인 북한 정보도 확인하지 못했는가. 둘째, 일반인들은 물론 북한에 관해 연구하는 학자들도 사실로 확인된 북한의 주장조차 소개하거나 알리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기 쉬운데, 안기부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주장을 널리 공표해도 진북용공으로 낙인찍히거나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인가.”

〈내외통신〉이 안기부의 무능이나 횡포를 드러내면서까지 그 궁색한 내용의 쪽지를 끼워놓은 것은 안기부의 막강한 권위와 무소불위의 힘을 뛰어 넘는 극우수구 언론의 억지와 압력 때문이었다. 탈냉전시대를 맞아 안기부와 〈내외통신〉이 김일성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 독립운동가였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밝히고자 했는데, 《북한조감》을 미리 받아본 극우 신문사가 거세게 항의를 했단다. 약 50년 동안 온 국민이 교육과 언론을 통해 김일성이 ‘가짜’ 독립운동가였다고 배우고 들어왔는데, 냉전이 끝났다고 안기부와 〈내외통신〉마저 김일성이 ‘진짜’라고 실토하면 당시까지 ‘김일성 가짜설’을 퍼뜨려온 언론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었다. 시대가 바뀌고 진실이 밝혀지면 사과하고 반성하는 게 아니라, 억지와 위협으로 끝까지 진실을 가리려고 발버둥치는 게 극우수구 언론의 참모습이다.

3) 북한 무기 수출에 대해

내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1986년 1월 28일 〈동아일보〉가 ‘북한 무기 3억 달러 판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는 ‘무기 시장의 새 판매상’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북한이 지난 73년과 83년 사이 제 3세계 국가들에 20억 달러 상당의 각종 무기를 판매했다고 말했다. 이 주간지는 무기를 판매하는 주요 제 3세계 국가들로 중공, 북한, 이스라엘, 브라질, 이집트, 파키스탄, 남아공화국, 인도 및 싱가포르 등을 지적하고.....”

이 기사를 읽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아마 북한의 무기생산 및 수출실적에

놀라움을 표하며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품게 될 것이다. 나는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다. 1986년 2월 3일자 U.S. News & World Report의 원문기사는 다음과 같았기 때문이다. ‘제3세계의 10대 무기판매 국가’를 소개하는데, 남한은 2위였다. 위 <동아일보> 기사에 9개국이 나열되어 있는데, 중공과 북한 사이에 남한을 집어넣으면 1위부터 10위까지 바른 순서가 되는 것이다. 더구나 원문기사 중에는 북한보다 남한의 무기수출 현황에 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남한의 전투기생산에 대한 사진까지 크게 실어놓고 있었다.

4) 북한 핵무기개발에 대해

내가 1995년 한국정치학회에서 ‘4월혁명과 미국의 개입’이란 논문을 발표하면서 1958년부터 남한에 미국 핵무기가 배치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중앙일보> 전문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다. “기자들은 뉴스거리가 있으면 지구 끝까지도 날아 갑니다”며 멀리 나를 찾아온 기자에게 미국 외교문서를 복사해 건네주며 남한의 핵무기 도입에 관해 설명해주었다. 그는 “와, 이거 우리 신문 1면 톱뉴스감인데요”하며 흥분하다시피 했다. 나는 “내 덕분에 특종 한 번 써보세요”라고 부추겼다.

그러나 26년이 지나도록 1면 톱뉴스는커녕 맨 뒤쪽 말단뉴스로도 보도되지 않았다. 북한 핵개발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터라 남한 핵무기 관련 기사에 신문사 간부들이 몹시 민감하게 반응하며 잘랐다는 것이었다. 남한 핵무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도 한사코 눈감아버리며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고,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는 두 눈 부릅뜨고 믿기 어려운 소문조차 시시콜콜 보도하는 남쪽 언론의 실상 아니겠는가.

2. 북한 대중문화

1) 언어에 대해

민족을 분류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주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언어다. 남한은 오래 전부터 써온 아름답고 정겨운 우리말조차 북한이 즐겨 쓰면 거부한다.

‘인민’이란 사람들을 가리키는 가장 보편적 말이다. 해방 전부터 오랫동안 써왔다. 영어 people에 가장 정확하게 들어맞는 말이다. 북한에서 널리 쓴다는 이유로 남한에선 일제 냄새가 짙게 풍기는 ‘국민’을 쓰고 있다.

‘동무’란 순수하고 정겨운 우리말이다. 남한엔 ‘어깨동무 내동무’라는 말만 겨우 남아있다. 북한에서 널리 쓴다는 이유로 ‘친구’라는 얼치기 한자어를 쓰고 있다. 참고로 중국에선 ‘붕우(朋友)’라는 단어를 흔히 쓴다.

2001년 3월 한완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창발성 (創發性)’이란 말을 잘 쓴다고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시비 걸고 <조선일보>가 거들었다. “북한 헌법, 노동당 규약 등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용어가 아무런 검증 없이 교육정책의 핵심적 용어로 도입돼 교육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역지가 도를 넘었다.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창발’을 “남이 모르거나 하지 아니한 것을 처음으로 또는 새롭게 밝혀 내거나 이루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교육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남한에서는 국적 불명의 외래어가 넘친다. 미국인들도 모르거나 쓰지 않는 영어 같은 외래어가 많이 쓰인다. 일본말이나 일본식 언어도 수없이 많다. 이러한 터에 우리말이라도 북한에서 널리 쓰면 쓰지 말자고 역지 부리는 것 아닌가.

참고로 남한 언어에 대한 북한 평가는 아래와 같다. 첫째, 김일성은 1966년 다음과 같이 교시했다. “지금 남조선 신문 같은 것을 보면 영어나 일본말을 섞어 쓰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한자말은 중국 사람들도 쓰지 않는 것까지 망탕 쓰고 있습니다. 사실 남조선에서 쓰고 있는 말에는 한자말과 일본말, 영어를 빼버리면 우리말은 ‘을’, ‘를’과 같은 토만 남는 형편입니다.”

둘째, 평양 백과사전출판사가 1988년 펴낸 <<조선개관>>의 평가도 비슷하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우리말과 글이 엄중한 위기를 겪고 있다. 남조선에서는 우리말의 순수성이 점차 사라지고 잡탕말로 변하여가고 있으며 우리글은 한자와 외래어에 뒤섞이어 알아볼 수 없게 되고 있다.”

셋째, 1999년 4월 <로동신문>의 평가는 더욱 부정적이다. 남쪽에서 외래어와 한자어의 남용으로 순수한 민족어가 거의 사라져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남북 언어의 단일성마저 상실되어가고 있다고 남쪽의 언어실태를 신랄히 비판했다. “남조선에서는 지금 우리 민족어가 외래어에 질식되어 없어질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특히 거리의 간판과 상표, 영화 제목 광고가 온통 외래어 투성이라고 지적하고, 신문 방송 출판물에서도 문법에 맞지 않고 뜻도 모호한 잡탕말을 망탕 쓰다 보니 도무지 어느 나라 글인지 분간 못할 정도라고 혹평한 것이다.

2) 신문과 방송에 대해

일반인은 물론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조차 북한 소식을 ‘직접’ 접하기 어렵다. <로동신문>을 읽을 수도 없고, <조선중앙방송>을 보거나 들을 수도 없다. 북한이 운영하는 <우리 민족끼리> 홈페이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곳에 접속하면 “불법.유해 정보 (사이트)에 대한 차단”이라는 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안내와 경고가 떠오른다.

노무현 정부 때는 <로동신문>을 인터넷으로 읽을 수 있었다. 일본 <조선통신>을 통해서였다. 내 학생들에게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며 화상에서만 읽고 출력하지는 말라고 했다. 신문을 인쇄하면 ‘이적 표현물 불법 소지죄’로 처벌받기 쉽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는 그마저도 못하고 있으니 진전이나 담보가 아니라 후퇴다.

나는 조선로동당의 6쪽짜리 기관지 <로동신문>을 공개하더라도 전혀 문제없으리라고 1990년대 중반부터 주장해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의 교시, 조선로동당의 동정 등을 선전하는 기사가 대부분이기에 일반인들은 처음 한두 번 호기심으로 읽다가 금세 싫증낼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폐쇄적이라며 남한 소식을 담은 풍선을 북쪽으로 날려 보내거나 그것을 지지 후원하는 개인과 단체가 적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개방적이라는 남한이 북한의 신문과 방송을 차단하는 것은 역설적 탄압이요 횡포다.

3) 문학과 예술에 대해

1998년 10월 평양을 방문했을 때다. 일요일 오후 모란봉에 오르니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행군’과는 다르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을밀대 근처에 한 가족이 둘러서서 노래 부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였다. 1970년대 남한에서 유행했던 노래다. 얼른 사진에 담았다. 스마트폰이 없을 때라 노랫말까지 사진에 담지 못한 게 아쉬웠다. 남쪽 유행가를 북녘에서도 부른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직접 맞닥뜨리니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개된 장소에서 ‘남조선의 퇴폐적 사랑 타령’이라니.

다음날엔 고려호텔에서 북녘 안내원들과 얼굴을 붉히며 협상을 끝내고, 남쪽 일행 두 사람만 우울한 기분으로 45층 회전 전망식당에 올랐다. 북녘 사람들 5-6명이 앉아 있는 데서 좀 떨어져 자리 잡고 점심 먹는데 근처 자동 피아노에서 귀에 익은 가락이 흘러나왔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고향의 봄>, <아침 이슬> 등이었다. 접대원을 불렀다. 우리 때문에 남쪽 노래 들려주는가 물었더니 아니라 했다.

폐쇄적 북한은 23년 전 1998년 남쪽 자본주의 노래를 공개적으로 허용했다. 개방적 남한은 23년 후 2021년까지 북녘 사회주의 노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1991년 소련 해체 및 냉전 종식 직후 남한 대통령부터 남북 체제경쟁은 끝났다고 한 터다.

북한에서는 노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문학과 예술 작품에 정치성이 깃들여있다. 선전 선동 도구이기 때문이다. 남한에서는 선전선동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지만, 북한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 사회요소다. 조선로동당의 핵심부서 가운데 하나가 선전선동부 아닌가. 북한에겐 남한 자본주의 문화가 퇴폐적이고, 남한에겐 북한 사회주의 문화가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남한 자본주의 문화를 일부라도 허용하는 북한이 폐쇄적인가, 북한 사회주의 문화를 일체 거부하는 남한이 폐쇄적인가.

3. 화해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의 길: 북한 문화 개방

남한 정부의 통일정책은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처음 만들어지고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 조금 다듬어졌다. 그리고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이다. 제1단계가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화해하고 협력하자는 것이다. 남한에서 진보와 보수가 잘못 정의되거나 부적절하게 분류되고 있는데, 이른바 ‘진보정권’이라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아니라 군사독재정권의 연장이나 다름없는 노태우-김영삼 극우보수 정권에서 만든 통일방안의 첫걸음이 평화공존 화해협력이란 말이다.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15만 평양시민에게 감동적 연설을 했다. “평양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북과 남 8000만 겨레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30여 년 전 ‘보수정부’가 남북 화해와 협력을 통일정책의 1단계로 설정하고, 3년 전 진보정부 대통령이 북한에 들어가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함께 살아야 한다고 외쳤으면서도, 여전히 북한 대중문화를 차단하고 있다. 어떻게 화해하고 무슨 수로 협력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엄청난 모순이요 지독한 역설이다.

1945년까지 한반도를 35년이나 강점하며 우리 언어를 빼앗고 언론을 짓밟으며 문화 말살 정책까지 자행했던 일본의 대중문화는 1998년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하지 않았는가. ‘왜색문화’라 경멸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면서 말이다.

무엇이 두려워 북한 대중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단 말인가. 이미 1990년대부터 체제경쟁은 끝났다고 큰소리까지 친 터에. 남한 경제력은 세계 10위 또는 최상위 5%에 든다. 군사력은 세계 6위 또는 최고 3%에 속한다. 문화력은 ‘강남스타일’, ‘방탄소년단’, ‘오징어게임’ 등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한다. 북한이 남한 문화를 경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남한이 북한 문화를 차단하는 것은 편협하고 옹졸하며 어이없을 뿐이다.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은 관계의 기본입니다

박미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 / 교육학 박사)

NCKK 언론위원회에서 ‘남북 교류와 평화의 전제조건’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에서 “분단 76년. 긴 세월만큼 남과 북은 서로 많이 다릅니다. 다른 만큼 우리 한반도는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점에 교육자로서 깊게 동의합니다. 다른 문화나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우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견문이 넓어지고 생각이 풍부해지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기본법 제 2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민주시민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며 소통하는 노력이라고 교육합니다. 남북교류와 평화를 교육하는 과정에서도 우리와 다른 북의 문화와 생활에 대해서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관계를 맺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제작한 영화가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BTS의 인기와 K-팝의 영향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우리나라를 문화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같은 민족이며 함께 평화통일의 관계를 맺어야 할 북의 문화와 생활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으며, 북의 대중문화를 접하는 것을 국가가 나서서 국가보안법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과 북이 분단된 이후, 함께 국제기구인 유엔에 가입하였고, 남북교류협력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과 북 정상 간의 만남과 교류가 여러 차례 진행되었으며, 각계각층의 만남과 교류를 진행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보안법에서는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제 7조에서는 북에 대한 정보를 알리거나 북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사실을 표현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의 항일 무장투쟁이 연상되는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3선 시의원을 파면하였습니다(안소희 파주시의원, 2020년 5월). 남북 교육교류 당시에 북의 서점에서 구입한 ‘민족의 세시풍속 이야기’가 거실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를 물어 30년 경력의 교사를 파면하였습니다(박미자 교사 등 교사 4명, 2020년 1월). 지난 2018년 4.27판문점 선언 당시 한

교사는 남북정상회담 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남의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북의 정상도 인상이 좋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재봉 교수님께서서는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조차 북한 소식을 ‘직접’ 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로동신문>을 읽을 수도 없고, <조선중앙방송>을 보거나 들을 수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곳에 접속하면 “불법·유해 정보(사이트)에 대한 차단”이라는 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안내와 경고가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이렇듯이 북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금지하는 남한은 사실상 문화적으로 매우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아야 행복할까요?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73년 동안 국가보안법은 우리에게 은연중에 삶에 스며들어 많은 것들을 강제했습니다. 성장과정에서 들었던 말들 중 “말이 많으면 공산당이다.” “사상이 의심스럽다”라는 말들이 갖는 두려움과 억압의 분위기를 기억합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이미 어린 시절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른의 말이나 행동을 비판하거나 사회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토론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아이들이 살아갈 교육적 가치와 방향은 나와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19상황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건강과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기다리는 과정을 경험하였습니다. 21세기교육의 화두는 협력과 상호존중입니다. 나와 타인이 어떻게 소통하며 협력할 것인가! 서로 의견이 달라도 배제하거나 배척하기 보다는 조금 기다려주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노력이 우리아이들에게 길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하는 것입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하여 떠나라고 호통치는 사회는 결코 안전한 사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의 대중문화를 이해하고 북의 생활문화를 존중할 수 있어야 남북이 교류하고 협력하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또한 이러한 열린 마음은 우리사회가 더욱 민주적이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일상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할 것입니다. 끝.

북에 대하여 우리사회를 거대한 정신병동으로 만든 <국가보안법>

유영호 ('알가왈北' 대표)

어느 나라든 그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그곳에 가서 직접 자신의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이 최고 이듯이 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자유왕래'가 정답이다. 하지만 '자유왕래'란 쌍방이 함께 추진해야 가능한 상황이기에 이번 토론회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 남측에서 북을 좀 더 알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으로 국한해서 북과 무관하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방법과 그 가능성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참고로 북은 1991년 신년사까지 자유왕래를 제안했다) 일반적으로 외국사회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영화나 소설 등 그 나라의 문학예술작품을 통해서 간접 경험하는 것이다. 직접 그 나라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특히 예술창작의 원칙으로 '사실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구체적으로는 소설보다 영화가 훨씬 더 대중적이며, 강력한 수단이다. 따라서 많은 통일운동단체에서도 '북바로알기운동'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영화'다. 통상 영화학에서 '영화란 현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반영론'에 따라 영화라는 소재는 북쪽 사회를 알기를 위한 강력한 수단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 유튜브라는 강력한 영상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어 그 이용편의는 더 할 수 없이 좋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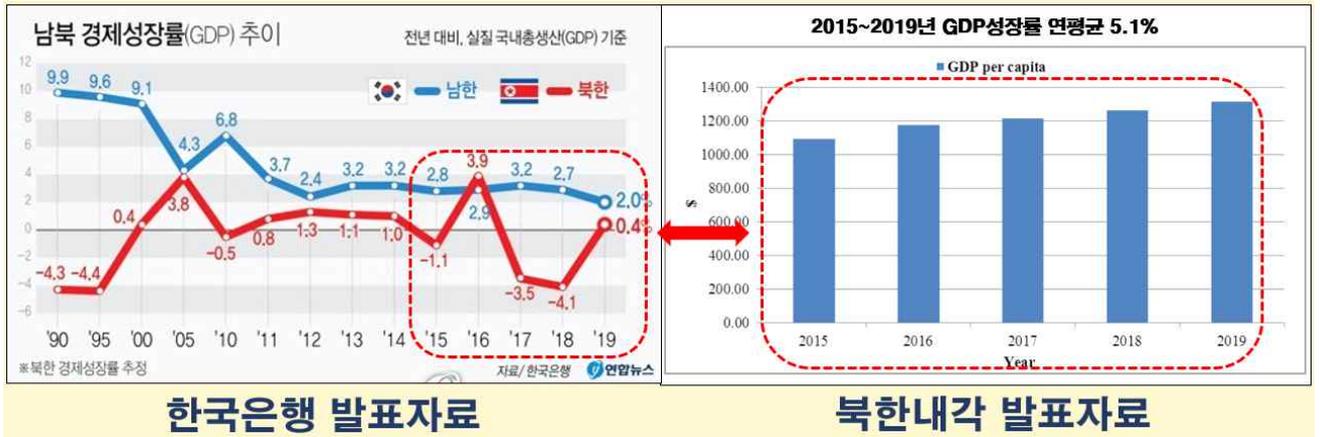
하지만 지금도 사회단체에서 '북한영화를 통한 북바로알기'를 하기 위해서는 유튜브를 통한 접근은 금지되어 있으며, 통일부 산하 <북한자료연구센터>에 사전신고를 통해 승낙을 받아야 할 수 있다. 물론 유튜브 자료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그 순간 국가보안법 7조 위반을 감내할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통일운동 뿐 아니라 북에 대한 학술연구 조차도 그 목적과 결과물이 북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순간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보다 위에서 그들의 사상을 검열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이런 조건에서 북을 제대로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결국 우리 사회는 분단이래 북에 대한 가짜뉴스의 끊임없는 재생산의 연속이었다. 이것은 다시 학자들과 언론에 의해 인용, 재인용되면서 북에 대한 정확한 뉴스로 변신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국가보안법이란 거대한 그물망에 갇혀 북에 대한 정보는 더 이상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되어 이것을 부정하는 순간 '종북주의

자'가 되고 만다. 결국 이러한 현실이 분단이래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는 북에 관한 한 '거대한 정신병동'이 되고 만 것이다.

일례로 지난 2014년 통일콘서트를 진행한 재미동포 신은미-황선씨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대동강이 한강보다 깨끗했습니다.”라는 신은미씨의 발언은 조선일보를 필두로 수많은 언론들에 의하여 비난받았고, 그는 졸지에 종북주의자가 되어 강제추방 당했다. 하지만 그를 종북주의자로 만든 그 언론들은 매년 여름 개최되는 평양청소년들의 대동강 도하경기를 ‘종북콘서트 사건’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후로도 자주 보도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 매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발표하는 한국은행보고서에 의하면 북은 최근(2015~2019년) 마이너스 경제성장으로 여전히 고난의 행군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지난 6월 북이 유엔에 제출한 자발적 국별 보고서 (Voluntary National Review)에 의하면 같은 기간 연평균 5.1%의 경제성장을 해왔다.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로 선발된 한국은행 연구원들의 분석이 이 정도로 잘못되었다면 크게 징계당해야 맞지만 그 분석대상은 미국이나 일본, 심지어 중국이라 러시아가 아닌 '북한'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있어서 북에 대한 보도와 연구에 있어서 진실은 사라지고, 북에 대한 악마화는 종교화되어 거대한 정신병동에 5천만 명을 가둬 두고 있다.

결국 '북한 대중문화의 개방'이란 구호 역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그 그물방을 벗어나기 힘들다. 결론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지 않는 속에서의 남북문화교류와 북바로알기를 위한 '북한 대중문화의 개방'은 허울좋은 구호에 불과할 것이다.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제도적 장치로 보장되지 않는 한 그것은 결국 남북통일정세에 따라 진실과 거짓 속에서 해매고 말 것이다.

특수자료 취급지침 폐기해야

정일용 (前 연합뉴스 기자 / 前 한국기자협회장)

▲ 북한 대중문화...남한에서 북한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창구

--현재 남한 내부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북한의 대중문화를 접할 수 있음.

--언론사는 '특수자료취급지침'에 따라 '특수자료취급기관'의 자격을 얻어 북한 원전(영상, 도서, 전자출판물 등)을 인용 보도하고 있음.

--북한 현지 방문이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북한 원전은 남한에서 북한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대로 가성비가 좋은 취재 수단.

--그러나 일반인들에겐 여전히 그림의 떡. 한 노동신문을 보려면 통일부 북한정보센터에 직접 가야 함. 온라인에서는 기사목록만 볼 수 있고 직접 북한자료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내용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북한자료는 특수자료라는 이름으로 분류돼 있음. 1970년 '불온간행물 취급 지침'으로 시작한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북한자료센터 등 특수자료 취급 기관 21개소는 일반자료 8,991건, 특수자료 56,380건을 보유하고 있음.

--전체 북한자료 중 특수자료 비중이 86.2%에 달함. 북한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 보니 일반인들의 북한자료 활용도는 현저하게 낮은 상황임(통일부는 2021년부터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1949~2019년 노동신문 기사목록 73만 건을 공개했지만 온라인서비스로 기사 내용을 볼 수 없음. 자료를 보려면 직접 북한자료센터를 방문해야 열람과 복사를 할 수 있음).

▲ 지침으로 북한 원전 접근 막을 수 있나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 정보접근권을 제한하려면 법률에 근거를 뒀야 함.

--법률도 아닌 지침으로 정보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있음(특수자료 취급지침은 국가정보원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음).

--이제는 북한자료에서 특수자료라는 굴레를 벗기고, 시민이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해야 함.

--북한 원전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자료 중 일부의 공개가 국가안보나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그런 사유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할 것임.

▲ 이용선 의원...북한자료관리법 제정 제안(2021.10.28 내일신문)

"과거 북한 노동신문도 온라인 열람 안 돼"

기사목록만 공개, 열람·복사는 방문해야
17개 기관들 '특수자료'라며 접근 제한
이용선 "북한자료관리법 제정 필요"

과거에 발행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보려면 통일부 북한정보센터에 직접 가야 한다. 온라인에서는 기사목록만 볼 수 있고 직접 북한자료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내용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북한자료가 특수자료로 분류돼 국민들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국민들을 북한자료로부터 떼어놓았던 과거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을)은 통일부 국감에서 이 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특수자료라는 용어로 북한자료를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현실이 현 시점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1970년 '불온간행물 취급 지침'으로 시작한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통일부와 북한자료센터 등 특수자료취급 기관 21개소는 일반자료 8991건, 특수자료 5만6380건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북한자료 중 특수자료 비중이 86.2%에 달한다.

북한연구소, 지역통일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 17개 취급기관은 모든 보유자료를 특수자료로 분류해냈다. 감독부처에 요청이 있으면 지침(9조)에 따라 공개하거나 일반자료로 재분류할 수 있지만 최근 5년간 통일부 산하 특수자료 취급기관에서는 그러한 요청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과 괴리된 북한 관련 활용도는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특수자료 활용 즉 열람, 대출, 복사 실적을 보면 북한자료센터와 통일교육원을 제외하면 의미 있는 활용실적이 없다"며 "일반인 방문이 많은 통일관의 경우에도 단체 방문객의 시청각자료 관람 외에는 실적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고는 올 5월 14일부터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1949~2019년 노동신문 기사목록 73만건이 공개됐지만 특수자료 취급지침 때문에 온라인서비스로 기사내용을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직접 북한자료센터를 방문해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목한 것이다.

지침 9조에서는 '디지털 콘텐츠는 인터넷과 보조기억매체 연결 차단 등의 보안조치를 한 열람전용 PC에서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북한자료에서 특수자료라는 굴레를 벗기고, 국가가 취급·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동서독 방송교류가 독일통일과 통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듯 바람직한 남과 북의 통합은 서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정보원법을 모범으로 하는 '특수자료 취급지침'의 통제적 관리기능은 북한 자료의 공개와 이용 확대라는 현실적 요청과는 여전히 상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많다

"며 "특수자료는 학술뿐만 아니라 문화, 출판, 방송 등 다양한 부분과 연결돼 있고 저작권 문제도 포함돼 있어 통합관리 체계가 필요한데 현 지침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가칭 '북한자료관리법'을 제정하고 통일부가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제안했다.

종합토론

사회 - 김형태 변호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토론 - 발제자 및 패널토론자

